

계엄의 공포 뜨거운 SNS... "우리는 5·18 광주에 빚졌다"

포털 사이트에 '1980년 5·18 광주' 재조명 글 잇따라
"고립무원 속 계엄군과 싸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광주일보 기자 성명·한강 '소년이 온다' 등 게시하기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SNS에서 45년 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광주시민들의 외로움과 공포에 공감하며 "광주에 빚을 졌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한 커뮤니티에는 '그때의 광주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등고시원 앞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는 모습과 계엄군의 군홧발에 목을 짓밟히는 시민군의 모습, 두 손이 묶인 채 일렬로 앞뒤로 있는 시민군의 모습, 태극기가 덮인 관 위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등이 업로드됐다.

누리꾼들은 '여태 부끄럽게도 역사책 좀 봤다고 그때의 설움과 고난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고립된 채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무슨 심정으로 버티신 건지 상상도 못하겠'고 적었다. 또 '아직까지 광주를 상대로 지역혐오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게 어이없다', '집에서 상황만 지켜보는 나도 손이 떨렸는데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계엄 정국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누리꾼들은 5·18 당시 고립됐던 광주를 떠올렸다.

'X' (옛 트위터)에는 "우리는 SNS를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공유했지만, 그때 광주는 외부와 모든게 단절돼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 "당시 시민군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다시 한번 광주에 고맙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또 "유튜브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이런 일을

당했을 광주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란 생각만 든다", "복귀가 있었다잖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너네도 군인 때려대만" 이런 소릴 평생 들었다고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 일동 명의로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쓴 공동 사표를 공유하며 광주에 감사를 표했다.

5·18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 KBS 드라마 '오월의 청춘' 등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다룬 작품들을 게시하며 공감을 표했다.

계엄 선포 당시 5·18을 경험한 광주·전남 출신 가족들로부터 격정 어린 안부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부모로부터 "무조건 집에 붙어있고, 밤에는 불 켜지 말고 문이랑 창문 꼭 잠가야한다", "나갈 때는 혼자 나가지 말고 가족들이랑 함께 다니고 신분증을 항상 들고 다녀라", "광주 출신인거 티 내지마라"는 등 당부를 들었던 게시글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깝다", "제 탓도 아닌데 괜히 죄송스럽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5·18 당시 광주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공유하며 "그들을 본 받아야 한다", "이년에는 결코 광주가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을 것이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시글들. "다시 한번 광주에 고맙고 미안하다"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민주, 상설특검으로 '尹 내란죄' 수사 추진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를 추진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법정부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비상계엄' 윤대통령 탄핵 찬성

리얼미터 유권자 504명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아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오월단체 간담회... "80년처럼 단결하자"

군·경에 시민 보호 요구 결의안

강기정 광주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비상시국 긴급 간담회 갖고 '80년 5월처럼' 단결하기로 결의했다.

강 시장은 5일 양재혁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형미 오월여민집 관장 등을 만나 "44년 전 5·18의 트라우마를 여전히 힘든 오월 가족들이 이번 사태로 더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걱정됐다"며 "오월의 경험 덕분에 광주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오월 단체를 비롯한 광주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모였고 행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힘을 모아 긴급히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자정께 5개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대학 총장 등 각 단체 대표들과 긴급 모임을 열어 비상계엄 효호를 선언하고 군경을 향해 시민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선포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비상계엄 직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연석회의를 보며 광주의 힘을 느꼈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앞서 전두환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재발한 것으로, 끝까지 이번 비상계엄 주동자를 처벌해야 한다.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오월 단체 모두가 합심하자"고 강조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지금부터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며 "반역죄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등을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